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12차시. 정보통신망법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3법의 의의
2. 최신 법률 개정의 함의
3.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조문

▶ 학습목표

1.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시행예정 정보통신망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정보통신망법 규제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I.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3법의 의의

1. 데이터 3법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개정배경

‘데이터 3법’이란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 보호법」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이들 세 법률을 칭하는 개념이다. 이들 세 법률은 ‘데이터 3법’이 강조됨에 따라 모두 ‘데이터이용의 활성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2020년 2월에 개정되었다. 그 중 데이터3법의 목적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난을 보다 더 철저히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불법 프로그램이나 기술(예를 들어 해킹, 백도어프로그램 설치 등) 등이 개발되어 우회적·간접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개인정보를 유출 및 도단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을 통해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동시에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사전에 보다 더 철저히 근절하여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이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기술 등을 ‘정보통신침해사고’로 규정하면서, 다양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성프로그램의 접근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 대비하고자 법개정이 논의되었다.

2.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침해사고 범주의 확장

정보통신망법 2020년도 개정에서는 법적 대응가능한 침해사고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즉 정보통신망법 정의규정인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였던 ‘침해사고’에 대해 법률개정전에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사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침해사고 발생은 설령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막대하므로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 목적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서는 ‘불법적인 우회를 통한 정보통신망 접근’이라는 다소 예방적인 측면도 침해사고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사전적 예방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방안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적 대응도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3. 데이터 3법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개정변화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 3법 중에서 개정 및 재규정된 내용들이 비교적 가장 간단한 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3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법률체계성 및 명료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통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기계적 통제나 제한보다는 통신이라는 특수성에 걸맞는 적법하고 타당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색하였고,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침해사고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대응방안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후적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제적인 예방적 대응방안도 주안점을 두고 정보보호를 위한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법률개정의 의미가 있다.

1) 데이터 3법의 일관성과 체계성

첫째, 또다른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서의 내용 및 규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법률에 이관하거나 삭제하는 등으로 데이터3법 상호간의 법률체계 정립에 기여하였다.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정 이전에는 개인정보 관련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여러 법률이 산재해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에서 종래 규제하던 개인정보 보호 내용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었으며, 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였다. 이처럼 적용 법률에 대한 처리기관이 혼선을 빚는 등 혼란이 뒤따르게 되자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도 그러한 혼란의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들 유사 법률의 정비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관련자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로부터 데이터 3법은 법률 상호간의 일관성(통일성), 체계성, 명료성을 갖추어 일반인 및 규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게 데이터 3법의 각 개별 법률의 법적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조문들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고 그 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독자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망법이 정비되는 개정을 이루게 되었다.

2) 독자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유지

둘째, 일부 적용대상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의 특수성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그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휴대용 단말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본인확인 기관의 지정 및 접근권한 동의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기존 규정은 설령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있다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유지하도록 하였다.

II. 정보통신망법령 체계도

정보통신망법의 법령 체계를 보면, 정보통신망법 아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훈령과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두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을 훈령 형식으로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등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정보보호 사전 점검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 등도 마련해두고 있다. 기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도 마련되어 있다.

III. 최신 법률 개정의 함의

1. 최신 법률개정의 의미 (2023.1.3. 개정/ 2023.7.4. 시행, 법률 제19154호)

1) 개정이유

2003년 1월 개정의 주요 목적은 정보통신망 이용자 권리의 보다 강력한 보호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국제적 해커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점검·감독 등을 보다 강화하여 예방조치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재난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미리 사전에 마련해두고 이러한 응급조치와 복구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대응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2) 개정내용

위의 개정목적에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이 일부 조문이 신설되었다.

<p>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함.</p> <p>“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p> <p>둘째,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1항 중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p> <p>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p> <p>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p>

-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들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셋째,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제1항 제6호의4를 제6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
- 4의2.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 4의3.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현행법의 의미 (2022.6.10. 일부개정/ 2022.12.11. 시행, 법률 제18871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올해 2022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된 법률이며, 그 시행은 작년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앞서 살펴본 위의 최신 개정이 올해 1월 3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불과 현행법이 시행된지 한달도 지나기도 전에 다시 또 2023년 1월에 개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률들 보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매우 발빠르게 법률 개정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1) 현행법 개정이유

현행법이 마련된 가장 큰 이유는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이다. 즉,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나아가 셋째,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데에 현행법 개정의 목적이 있다.

2) 현행법 개정의 주요내용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을 주요 개정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법률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6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제48조의3).
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의 보존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48조의4).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을 유인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제49조의2).
마.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49조의3 신설).
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을 추가함(제52조제3항제7호).
사.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76조제3항제11의3호 신설).

가. 신고자 포상금지급

현행법에서는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인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다(제47조의6). 이러한 포상금제도는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보안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사후적 대처 보다는 누구나 이러한 보안 및 침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취약점에 대해 사전에 미리 신고를 장려함으로써 사전에 침해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적 대응방안의 강화이다.

나. 침해사고신고의 공유

침해사고란 첫째,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이나 둘째,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다. 침해사고발생시 대처의 구체화

개정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침해사고 발생시 발생의 원인분석과 피해확산의 방지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개정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원인분석 및 피해확산방지라는 기존의 추상적 의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정보통신망 운영자가 취하도록 개

정되었다(제48조의4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의 의무에 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발생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의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48조의4 제2항).

라.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을 유인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정보가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다(제49조의2).

이에 더하여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요구되는 긴급조치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첫째, 접속경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둘째,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해야 하고, 셋째, 이용자에게 이러한 속이는 행위에 의해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신설하였다.(제49조의2 제3항 제3호 신설).

마.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제공 중지요청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이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제49조의3 신설). 이때 이러한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제49조의3 신설).

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평가인증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범위가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늘어나게 되었다.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존사업(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에 덧붙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도 추가되었다(제52조 제3항 제7호).

사. 과태료부과대상의 추가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부과대상의 불법행위가 추가되었다. 개정전 종래의 과태료부과 대상에 더하여 현행법에서는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도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문을 마련하였다(제76조 제3항 제11의3호 신설).

IV.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조문

1. 전체 개요

정보통신망법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1조), 각종 용어들의 정의(2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호 등에 관한 시책마련(4조), 법률과의 관계(5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제3장은 ‘전자문서중계자 제도’가 사문화됨에 따라 2015년 6월에 삭제되었고, 제4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데이터 3법’에 따른 법률의 체계화에 따라 관련 내용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비되면서 정보통신망법의 유사내용은 삭제되었다. 제5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41조~42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다양한 권리보호(44조 ~ 44조의2), 임시조치(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단체의 자율규제(44조의4),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44조의10)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45조~52조)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특히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신고, 원인 분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48조~48조의6),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수집금지(49조의2) 및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제공 중지(49조의3) 등을 담고 있다. 제7장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절차 및 안전성 확보(57조), 이용자권리(58조), 분쟁조정(59조), 손해배상(60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국제협력(62조~63조의2), 제9장에서는 자료제출, 비밀유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의제 등을 보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장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총칙(제1장)

1) 법률목적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모두 ‘데이터이용의 활성화’를 공통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활용서비스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관련한 유사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규제 및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내용은 각 법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이라는 서비스활성화의 목적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양 축으로 하고 있는데, 법 제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독특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도 동시에 같은 조문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즉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동시에 이용자 또한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제2항).

3) 다른 법률과 관계

유사 내용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은 국경이 없다는 대표적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 이용자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2020년 6월 9일 국외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5조의2를 신설하였다.

3.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제5장)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통신망은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에서 음란·폭력 등과 같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청소년유해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그리고 정보제공자가 위와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 청소년에게 금지되도록 하고 있으며(제42조), 나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제42조의2),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73조 2호 및 3호)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

2) 타인의 권리보호

1인 미디어가 활발한 오늘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개인의 권리 침해는 정보통신사업자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금지(제1항)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이용자의 권리침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제2항),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권리침해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부터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게 침해사실소명과 함께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제44조의2 제1항). 이러한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2023년 1월 3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7월 4일 시행)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였다.

3) 임시조치와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제44조의3)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는 기술개발에 따라 매우 발빠르게 진행되므로 그때그때 정부 기관이 나서서 시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고(제1항),

나아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아래와 같은 불법정보(44조의7)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제2항) 하는 규정이 2018년 12월 24에 신설되었다.

4)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한편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8일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로 신설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지정하였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둘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

4.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제6장)

1) 불법 정보통신망 침해(제48조)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 불법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항),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금지(제2항), 정보통신망 장애발생금지(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70조의2), 정보통신망 침입(제1항)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제3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71조) 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2) 침해사고 대응

특히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한 침해사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침해사고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되고 있으며(제48조의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48조의3).

5. 벌칙 (제10장)

1)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은 이제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에 대한 비방 등도 이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 전 부개정된 2001년 1월부터 ‘사이버명예훼손’ 또는 ‘인터넷명예훼손’ 등으로 명명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벌칙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명예훼손죄와 매우 유사한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70조 제1항),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동 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다(제3항).

2)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사실 사이버명예훼손과 함께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행위는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행위이다. 악성프로그램은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탈취하는 등 매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제70조의2)을 2016년 3월에 신설하였으며 가장 중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는 또한 정보통신망에 불법침입하는 것이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71조 제1항 9호), 나아가 미수형태로도 처벌가능하다(동조 제2항). 즉 정보통신망에 불법침입하여 어떤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차단하는 위험범의 형태이다.

3)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및 비밀침해 등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중요한 범죄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제48조 제3항).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49조),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10호 및 11호)

4) 불법정보수집

빅데이터 산업의 전제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는 오늘날 고부가가치로 떠오르게 되었고 무차별적인 수집과 불법판매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49조의2 제1항),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2조 제1항 2호).

5)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위반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정보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지우며(제42조),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제42조의2).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3조 2호 및 3호).

6) 불법정보유통금지

정보통신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빠른 전파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음란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정보, 명예훼손정보, 사행행위정보, 불법 개인정보거래정보, 총포·화약류 제조정보 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44조의7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란정보를 유포하거나 공포심·불안감유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